

#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

2017. 2.

금융위원회  
금융감독원

## 목 차

### I. 검토 배경 ..... 1

### II. 유사투자자문업 개괄 ..... 2

※ ①영업방식, ②영업현황, ③매출액, ④감독권

### III. 문제점 및 한계 ..... 4

※ ① 폐업·유령업자에 대한 관리문제, ② 영업실태 확인곤란,  
③ 폐쇄적·음성적 영업행위, ④ 증권방송 TV의 파급력,  
⑤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 및 관계기관간 협조채널 부족

### IV. 개선 방안 ..... 7

#### 1. 제도적 개선방안 ..... 8

※ ① 자격요건 마련 및 유효기간 설정, ② 의무교육제 도입  
③ 편법영업자 직권말소, ④ 자료제출 요구권의 이행력 확보,  
⑤ 미신고 업자 형사벌 부과,

#### 2. 감독적 개선방안 ..... 10

※ ① 상시적 불법행위 점검, ②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,  
③ 파급력이 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, ④ 회원제 암행점검  
⑤ 신고포상금 활용

### V. 추진 계획 ..... 13

※ [참고 1]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 비교  
[참고 2] '16년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태 조사결과  
[참고 3] '16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영업 점검결과

## I. 추진 배경

□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실 투자자문업자의 **양성화** 목적으로 '97.1월  
舊증권거래법을 통해 도입된 이래, 신고 만으로 영업 가능

○ 낮은 진입장벽, IT 발전에 따른 다양한 영업채널 확보로 신고  
업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'16.12월말 신고업자 수는 1,218개

\* (97년)54사 → (06년)102사 → (09년)259사 → (12년)573사 → (16년)1,218사

□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\* 이후, 유사투자자문업이 감독  
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 제기

\*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이희진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 
허위사실을 유포하고,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 구속

○ 금융당국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점검\*을 하고 있으나,  
제도적·감독적 한계로 적극적 관리는 쉽지 않은 상황

\* ('16. 8월)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전수점검 실시(1,075사)

\* ('16.12월) 빈번한 민원발생 업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점검(306사)

○ 일부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, 등록제 전환 등을 주장하나,  
이 경우 음지에서 불법적 활동\*이 증가하여 오히려  
투자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는 부작용 우려

\*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 그  
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, 무인가 영업행위, 유사수신, 불공정거래 등  
음지에서의 불법적 영업행위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

□ 기존 사설업자의 양성화 정책은 유지하되, 건전한 투자문화  
조성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

⇒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행태 및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,  
이를 토대로 건전한 영업,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

## II. 유사투자자문업 개괄

① (영 업) “불특정 다수인”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 
금융투자상품에 대한 “투자조언”을業으로 영위하는 자

① 홈페이지, 증권방송매체, 출판물, 강연회, 통신수단 등을 통해  
유료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 (자본시장법§10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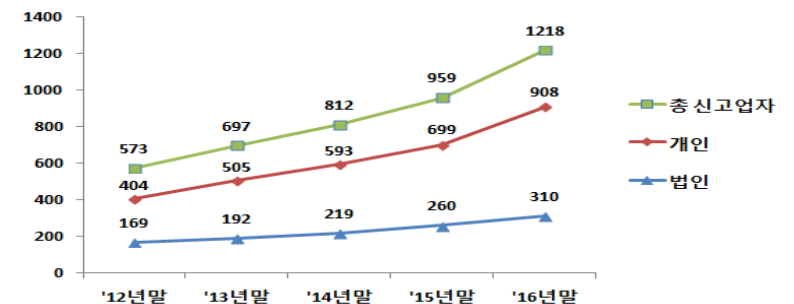
② “높은 수익률 보장”이라는 형태로 광고를 통해 유료회원을  
모집한 후(→허위광고, 유사수신 위험),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 
투자종목, 매수·매도시점 정보를 송신(→시세조종 위험)

② (신고업자) '16년말 1,218개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

① 개인사업자 908개, 법인사업자 310개이며, 메신저 등 다양한  
모바일 채널을 통한 영업 활성화로 신고업자 수 증가세

② '16.8월 점검결과(1,075개 대상), 법인 사업자(자료제출 113개) 중,  
68%(77개사)는 자기자본 규모 1억원 미만 영세업체

< 유사투자자문업자 수 변화 추이 >



### ③ (매출액) '15년 1,189억원 → '16년 1,234억원 (추정, 상반기 617억원)

\* 영업실태 조사 자료제출에 응답한 354개 업체 대상 (법인 113사, 개인 241사)

- ❶ '16년 상반기 법인사업자 총매출액은 553억원으로 전체(617억원)의 89.6%이며, 상위 10사의 매출액은 전체의 62.8% 차지

\* 법인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9.8억원, 개인사업자는 5,319만원으로 추정

- ❷ 매출액 상위 10사 중 6사는 방송플랫폼 사업자이며, (사업자별 연평균매출액 77.5억원, 추정)이 중 4사가 언론 계열사

### ④ (감 독) 제도권 금융회사에 비해 제한적 관리·감독

- ❶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을 가능하며,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\* (자본시장법§449)

\* 형사벌(3천만원)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개정중 (현 법제처 심사중)

- ❷ 진입이후, 폐업 또는 소재지·대표자 변경시 2주내 보고 의무가 있으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 없음

- ❸ 신고업자의 영업현황 파악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있으나 해태·불응에 대한 제재수단 없음

- ❹ 금투업자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중 일부 규정이 적용되며 위배시 형사벌 적용

#### <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>

- 투자자로부터 금전·증권 등을 보관·예탁 받는 행위
- 투자자 등에게 금전·증권 등을 대여하거나 중개·주선하는 행위
- 계약 수수료 외 대가수령 금지
- 선행매매 금지 등

## III. 문제점 및 한계

### ① 사업폐지, 소재불명 등 유령업자에 대한 관리 곤란

- ❶ '16.8월 점검결과, 신고업자(1,075개) 중 283개 업자(26.3%)가 국세청에 폐업신고하였으나, 자본시장법상 계속 영업중으로 나타나 폐업신고 후 폐지신고\*를 해태하거나 편법영업 의혹

\* 자본시장법 제101조제2항 :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할 경우 2주 이내 신고 의무

- ❷ 또한, 신고된 연락처 및 홈페이지 점검 결과\*, 다수의 업체가 전화연락이 불가하거나(139개),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하여 (316개) 유사시 연락두절 등 금융이용자 보호에 취약

\* 자본시장법 제101조제2항 : 대표자, 명칭, 소재지 변경시 2주 이내 신고 의무

⇒ 폐업, 소재지변경 등 보고의무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

### ②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파악이 곤란

- ❶ 영업행위 전수조사시, 신고된 1,075개 업체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, 33%인 354개 업체 만이 회신

- ❷ 금융위(원)는 필요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(법§101③)

- 제출 불응 등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정확한 영업현황 실태파악에 한계

⇒ 자료제출 요구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업자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 필요

### ③ 폐쇄적·음성적 영업행위로 단속 및 적발이 어려움

- ❶ 무인가 영업행위가 증가\*하나, 인터넷카페, SMS 등을 이용한 회원제 방식의 폐쇄적 영업으로 단속이 어려움

\* 사이버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적발 건수 : ('13년)34건 → ('15년)505건

- ❷ 일부는 허용된 업무범위를 넘어선 1:1 투자상담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(투자자문업)도 영위하나 사실상 확인 곤란

⇒ 금융당국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, 내부 감독함으로써 음성적 회원제 운영방식에 대한 경각심 제고 필요

### ④ 증권TV 방송 등을 통한 광범위한 피해 발생

- ❶ 파급효과가 큰 대중적 TV방송을 통해 비상장주식 추천, 고수익 보장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 빈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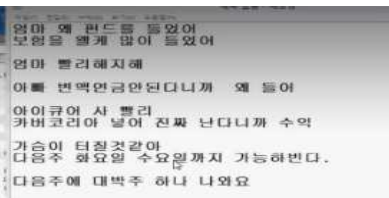
- ❷ TV방송의 공신력을 믿고, 검증되지 않은 업자의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추종하는 투자 및 피해사례\* 발생

\* 이희진은 본인이 전문성이 있다고 투자자가 믿게 하기 위해 증권 방송 TV에 출연하였다고 진술

이희진의 비상장 주식 추천 방송(1)



이희진의 비상장 주식 추천 방송(2)



⇒ 파급력이 높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강화 및 검증되지 않은 업자의 방송출연 자제 필요

### ⑤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 & 관계기관간 체계적 협조 미약

- ❶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비제도권 영리업자로서 금융회사가 아니나, “명칭”이 투자자문업과 명칭이 유사하여 금융당국의 감독·검사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해하는 경우 빈번

- 일부 업자는 ‘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영업한다’는 사실을 광고에 포함하여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악용

- ❷ 이러한 투자자의 혼동으로 유사투자자문행위에 대한 민원·피해사례가 증가\*

\* [금감원] ('13년) 60→('14년) 81→('15년) 82→('16년) 183

[소비자원] ('13년) 73→('14년) 147→('15년) 207→('16년) 213

- 그러나, 허위·과장광고, 계약해지 환불거부 등은 유관기관 소관사항이어서 금융당국 만의 대응에 어려움

<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피해유형 현황('15.1.1.~'16.6.30.)>

※ 출처 : 한국소비자보호원

피해 유형		건 수(건)	비 율(%)
계약해지 관련 (227건, 77.8%)	위약금 과다 공제	198	67.8
	계약해지 거절	16	5.5
	환급 지연	13	4.5
계약불이행 (59건, 20.2%)	환급보장 불이행	39	13.4
	서비스 중단	20	6.8
기 타		6	2.0
계		292	100.0

⇒ 유사수신 행위, 허위·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, 미신고·무인가 영업행위, 소비자권리 침해행위 등에 대한 체계적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필요

## IV. 개선방안

### <개요>

####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및 선량한 투자자 피해 방지

#### 추진 목표

- 1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
- 2 사설자문업자의 양성화 지속 유도
- 3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
- 4 실효성있는 감독체계 구축

#### 건전한 영업행태 유도

- ① 자격요건 및 유효기간 설정
- ② 편법영업 직권말소권 도입
- ③ 자료제출권의 이행력 확보

#### 사전적 예방장치 마련

- ① 미신고 업자에 대한 형사벌
- ②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교육제

#### 추진방안

#### 불법행위 감독강화

- ① 상시적 불법영업 행위 감독
- ② 회원제 운영 압행점검
- ③ 불법금융 신고포상금 활성화

####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

- ① 방송출연자 등 감독강화
- ② 수사기관, 소보원 등과 협조적 감독체계 구축

## 1 제도적 개선방안

### (1) 자격요건 마련 및 사전교육 의무화

- ☐ 현행 신고제\*는 유지하되,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축소

\* (신고사항) 상호, 소재지, 대표자명, 조직형태, 자본금, 대주주 인적사항, 영위업무(문자메세지, 홈페이지 등), 인적·물적 구비현황 등

-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\* 등을 위반한 자, 자진폐업 또는 직권말소 후 일정기간(예: 폐업 1년, 직권말소 5년)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\* 예: 자본시장법, 유사수신행위법, 대부업법, 공정채권추심법 등

- 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교육을(예: 금융투자협회)을 받도록 의무화

\* 既신고업자도 제도 시행후 일정기간 내(예: 6개월)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

- ☐ 영업가능 유효기한을 일정기간(예: 5년)으로 제한하고, 계속적 사업 영위를 위한 갱신 신청시 자격여부 주기적 확인 및 재교육

▶ (요조치사항) 자본시장법 제101조 개정

### (2) 편법적 영업행위시 직권말소권 도입

- ☐ 유령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발생과 관리·감독상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해 직권말소권 도입

- 국세청에 폐업신고 후에도 편법적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자에 대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

▶ (요조치사항) 자본시장법 제101조 개정

### (3) 자료제출 요구권의 이행강제력 확보

-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해 **정당한 사유없이** 이를 기피·해태하는 경우 **과태료**를 부과하고, “3 Strike Out” 도입
  - 자료제출 요구, 보고의무 미이행시 **과태료**(1천만원 이하)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
  - 상기 사유로 **3회 이상 연속하여 과태료**를 부과받은 경우 **정상적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**하고 **직권말소**

▶ (요조치사항) 자본시장법 제101조 개정

### (4) 미신고 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(既추진)

-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**제재수단**을 현행 과태료 부과(1천만원 이하)에서 **벌금형으로 변경** (1년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)
  - 미신고 업자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**현실적 제약**<sup>\*</sup>으로 인해 사실상 적발하더라도 **과태료 부과조치가 곤란**
    - \* 미신고 업자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혐의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법적근거가 없어 혐의자 특징이 불가능
  - 벌칙조항이 마련되면 **검·경의 형사적 수사 및 조치**가 가능해지고, **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넷 사이트 폐쇄**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

▶ (요조치사항) 자본시장법 제446조 개정 중 (현 법제처 심사중)

## 2 감독적 개선방안

### (1) 상시적 불법영업 행위 감독

- 금감원을 통해 주기적(2~3년)으로 **신고업자의 영업행태**를 전수조사하고, 민원발생업체 등을 중심으로 **불법행위 점검**(연중)
  - 검·경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무인가 금융투자업 행위, 유사수신 행위, 불공정거래 등 **음성적 불법행위**에 대한 **합동 단속**

▶ (요조치사항) 상시적 영업행위 점검

### (2) 수사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

- 수사기관(경찰)과의 **정례협의체** 구성 등 **상시 협력채널**을 마련하여 불법·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**신속히 대응**
  - **정례협의체**를 통해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**수사절차**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**통로(Hot-Line)** 마련
  - 경찰청과 업무협조를 통해, **연1회 이상 정례협의회 개최** 추진
- 한국소비자원과도 **Hot-Line**을 구축하여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**예방 및 홍보활동** 강화
  -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**피해사례**를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, 투자자들의 업체선정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여건 마련
  - 또한, 주기적으로 민원발생 현황, 피해사례,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보도자료 배포하여 경각심 고취

▶ (요조치사항) 수사기관, 한국소비자원과 MOU 체결 등

### (3) 파급력이 큰 사업자에 대한 감독강화

#### □ 방송출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

- 방송출연 유사투자업자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공신력을 이용한 불법·불건전 영업행위 상시 점검\*

\* 예: 방송출연 사실 신고 및 1:1 투자자문행위, 유사수신행위, 불공정거래 등 점검

-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방송출연이 제한되고, 무분별한 방송출연으로 투자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, 증권TV 방송사 등과 협력체계 구축\*

\* 예: 방송출연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여부 확인, 방송내용 심의강화 등

#### □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

-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매출액은 통상 회원수와 비례하므로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(예: 1억원)인 사업자를 중점 감독 대상으로 고려하여 영업행태 주기적 점검 및 감독 강화

▶ (요조치사항) 방통위, 증권TV 방송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

### (4) 회원제 영업방식에 대한 암행점검

- 금융당국 직원이 고객신분으로 특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한 후\*,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법·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 실시

\* 연간 40~50개 업체에 대하여 암행점검 실시 목표

- 과장광고, 방송출연, 민원빈발, 수사기관 통보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여 1:1 자문행위, 투자자 문제 등\* 중점점검

\* (중점점검사항) ① 1:1 투자자문 영위여부, ②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여부, ③ 서비스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여부, ④ 수익률 관련 허위광고 여부, ⑤ 회원가입비의 적절한 환불 여부, ⑥ 유사수신행위 등

▶ (요조치사항) 회원제 운영 암행점검 실시

### (5) 불법금융행위 신고포상 활성화 유도

-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·불건전 행위에 대한 포상금 제도\*를 적극 홍보하여 감시·신고 활성화 도모

\*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최고 1천만원의 '불법금융 파파라치' 신고제 운영 중

-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 HTS, 금투협회 홈페이지, 증권방송TV에서 팝업 방식으로 안내 추진
-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효과를 위해 동종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문사 업계에 적극적 제보 요청
-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, 우수 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으로 우선 추천

▶ (요조치사항) 금융회사에 대한 협조 요청

## V. 추진 계획 (안)

◆ 제도적 개선사항은 금년중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,  
감독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력채널 구축

내 용	일 정 (조치사항)
<b>1. 제도적 개선방안</b>	
① 자격요건 마련 및 유효기간 설정	3/4분기 자본시장법 개정
②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교육제 도입	3/4분기 자본시장법 개정
③ 편법영업자에 대한 직권말소권 도입	3/4분기 자본시장법 개정
④ 자료제출 요구권의 이행강제력 확보	3/4분기 자본시장법 개정
⑤ 미신고 영업자에 대한 형사벌 부과	3/4분기 자본시장법 개정
<b>2. 감독적 개선방안</b>	
① 상시적 불법행위 점검	상 시 영업행태 및 불법행위 점검(금감원)
② 유관기관(경찰 등) 협조체계 구축	2/4분기 유관기관 MOU 체결 등(금감원)
③ 파급력이 큰 사업자에 대한 감독강화	2/4분기 방통위 등과 협력체결 등(금감원)
④ 회원제 운영방식 암행점검	2/4분기 암행점검 실시 (금감원)
⑤ 불법금융행위 포상금 제도 활용	2/4분기 금융기관 협조요청 (금감원)

## 참고 1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 비교

구 분	투자자문업자	유사투자자문업자
진입요건	- 금융위 등록 * 자기자본, 대주주, 운용전문 인력 요건 등 충족 필요	- 금융위(금감원) 신고 * 자격요건 없음 (단순신고 후 영위 가능)
영업방법	- 일대일(1:1) 방식 투자자문 * 개별 투자자별로 차별화된 자문서비스 제공	- 불특정 다수 대상 투자자문 *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자문서비스 제공
감독·검사	- 금감원 검사대상에 해당 (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)	- 금감원 검사대상 아님
금지 행위	- 부당권유금지, 투자광고규제 등 적용 * 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규제 및 금융투자회사 공통 영업 행위규제 모두 적용	- 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준용 * 금잔증권 등의 보관예탁 금지, 금전·증권 등의 대여 금지, 선행매매 금지 등
공시 및 보고	- 주요 경영사항 공시 및 업무보고서 등 제출 의무	- 업무 폐지, 명칭·소재지· 대표자 변경시 보고 의무
등록(신고) 여부 확인 방법	- 금감원 홈페이지 ‘파인’ → ‘제도권금융회사조회’ 에서 확인 가능	- 금감원 홈페이지 ‘파인’ → ‘금융소비자보호처’ → ‘금융회사길라잡이’ → ‘금융소비자 유의사항’ → ‘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’ 에서 확인 가능



## 참고 2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태 전수조사 결과(16.8월)

※ (대상)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('16.6.20.기준, 1,075개)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 영위여부를 파악하고, 이 중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이 온 354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영업현황 분석 (금감원)

### 1. 영업행태

-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 서비스 조회결과, 1,075개 신고업자 중 283개 업자(26.3%)는 사업자등록을 이미 폐지
  - 신고업자 중 연락두절 업자(유선, 인터넷)는 전체의 1/3 수준인 316개(29.4%)로 연락처 ·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신고 불이행

### 2. 영업현황 분석 (대상 : 법인 113개, 개인 241사 기준)

- (조직규모) 1인(개인사업자)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전체의 68.1%(241사)에 달하는 등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
  - 법인사업자(113사)의 평균 자기자본은 41억원\*이나, 자기자본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도 상당수(77개사, 68%)
    - \* 전업자문사의 FY'15 평균 자기자본은 66억원
- (매출규모) '15년 총 매출액은 1,189억원이고, '16년 총매출액은 1,234억원으로 추정('16년 상반기 기준 총매출액 617억원의 2배 가정)
  - '16년도 법인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9.8억, 개인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5,319만원으로 추정
  - 매출액 상위 10사 중 6사가 방송플랫폼 사업자이며, 증권 방송TV 등 언론계열 방송사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1.2% 차지
- (영업방식) 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(20명)의 경우 주로 카페(16명), SMS(15명), 방송(13명)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활용
  - 인터넷 방송 및 케이블 방송을 영업 홍보수단으로 활용

## 참고 3 16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영업 점검결과

※ (대상) '16.8월부터 4개월간 신규업체, 민원발생 업체, 장기미점검 업체 등 306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홈페이지 점검, 자료제출 요구, 유선 확인 등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 점검 (금감원)

### ① 불법영업 혐의 업자 (수사기관 등 통보) : 35개

- 35개 업자(11.4%)가 다음의 불법영업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

【불법영업 혐의 유형별 업자 수】

유형	불법영업 혐의 내용	업자수
①	미등록 투자자문 · 일임업	18개
②	금전대여 또는 중개 · 주선	11개*
③	무인가 금융투자업(비상장주식 매매중개 등)	5개*
④	금전 등 고객재산 예탁 · 보관	2개*
⑤	수익률 허위 · 과장 광고	1개
계		37개

\* 미라클인베스트먼트(이희진 사건)는 3가지 불법영업 혐의에 해당

### ②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 (주의공문 발송) : 76개

- 76개 업자\*(24.8%)가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

\* 14개 업체가 상기 ① 불법영업 혐의업자와 중복

【불건전 영업행위 유형별 업자 수】

유형	불건전 영업행위 내용	업자수
①	과대광고(과장된 수익률 제시 등)	15개
②	수수료 환불기준 불명확 또는 미공시	56개
③	기타(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)	9개
계		80개*

\* 4개 업체가 2가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

### ③ 유사투자자문업 미영위(추정) 업자 (폐지신고 안내) : 106개

- 연락두절, 홈페이지 등 부존재 등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을 미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06개 업자에 대해 폐지신고 안내